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2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17. 8. 25.(금) 14:10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이호성 위원장
허욱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표철수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음

제2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4시 10분 개회 】

1. 성원보고

- 이효성 위원장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이효성 위원장
 - 2017년 제2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제23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1. 서면 회의 결과보고

○ 이효성 위원장

- 그리고 제24차 및 제25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의결안건> 6건, <보고안건> 1건이 원안대로 의결·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의결안건 가> ‘법정위원회 보궐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의거 비공개로 진행하고, 나머지 <보고안건> 2건은 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에서 <의결안건 가>는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고, <보고안건 가>와 <보고안건 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전 심의를 들어가기 전에 장내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보고안건>과 <의결안건> 순으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보고사항

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단말기유통구조 개선 등 대책(안)에 관한 사항

○ 이효성 위원장

- <보고사항 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단말기유통구조 개선 등 대책(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유는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등 단말기유통구조 개선 대책과 데이터 로밍 요금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개요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현행 가계통신비의 구조는 ‘통신장비, 통신서비스, 우편서비스’ 3가지로 구성되며 가계통신비 추세는 ‘12년 152,359원에서 ‘16년 144,001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통신서비스 요금만을 별도로 살펴볼 때 ‘14년 126,297원에서 ‘16년 124,496원으로 다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향후 검토방향입니다. ‘14년 10월에 단말기유통법 제정 시행 이후 가계통신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가계지출에서 가계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습

니다. 이에 방통위 차원에서 통신비 부담 완화 대책으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단말기 구매비용을 줄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부 추진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및 세부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대란과 부당한 이용자 차별로 인한 부작용이 커서 단기간에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14년 10월 단말기유통법에 3년간 한시적으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도입했고, 금년 9월 30일 일몰 예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정책방향은 경쟁을 통한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해 단말기유통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지원금 상한제(단말기유통법 제4조제1항·제2항)를 폐지하고, 이후 부당한 지원금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세부시행 계획입니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른 단말기유통법·단말기유통법 시행령 및 하위 고시를 정비하겠습니다. 단말기유통법 제4조제1항(상한액 고시)·제2항(상한액 초과 금지)을 삭제하고 법 제4조제2항을 포함하고 있는 관련 조항들을 개정하겠습니다. 관련 조항들로 법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2항 및 제5항, 제15조제1항 및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별표 2]가 되겠습니다. 법률과 시행령은 법률 또는 시행령의 다른 개정 수요가 있을 때 삭제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시사항입니다. 단말기유통법 제4조제1항을 근거로 한 고시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4조제2항을 포함하고 있는 고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긴급중지 명령처리 기준」 2개의 고시를 개정 또는 삭제하고자 합니다. 상한액 폐지 시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단말기유통법 제도를 금년 하반기부터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단말기유통법 9월 30일 일몰 예정인 제조사의 출고가 등 자료제출 의무조항 연장을 추진하고 사전승낙제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2가지 사항은 법 개정사항이어서 법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말기유통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조사 거부·방해 행위 관련 과태료를 강화하고, 지원금 공시주기 조정 관련 고시를 필요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한제 폐지 시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금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방통위 그다음에 KAIT, 이동통신사들과 함께 전국 상황반을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상황반에서는 부당한 지원금 차별 행위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동통신 3사와 핫라인을 구축하여 위법행위들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분리공시제 도입 추진입니다. 유통구조 투명화를 위한 단말기 출고가 인하 유도를 위해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할 때 이동통신사와 제조업자의 재원을 구분하도록 분리공시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시행 계획입니다. 분리공시제 도입 관련 단말기유통법 개정을 금년 정기국회부터 개정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목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개정을 완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분리공시제 관련해서는 신경민 의원 법안 등 6개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분리공시제 관련 법 제4조제3항 지원금 공시 후단 신설 및 법 제12조제1항 단서를 삭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리공시제 도입 관련 단말기유통법이 개정된다면 그 이후에 분리공시제 세부 시행을 위해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리공시제 도입과 관련 보완책 마련도 병행하겠습니다. 제조사의 장려금과 지원금 규모에 대한 정보파악을 위해 금년 9월 말 일몰 예정되어 있는 제조사 자료제출 의무 규정 연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신용현 의원 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회 법안 심사가 논의된다면 최우선적으로 처리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려금과 지원금 지급 규모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제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 비교 공시가 되겠습니다. 신규 단말기가 출시된 이후 일정 기간 동안 국내의 출고가 인하 폭이

해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사례 등 국내 단말기 출고가가 해외보다 높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국내·외 갤럭시 노트4 출고가 변화를 참고로 <표>로 적시했습니다. 향후 정책방향입니다.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에 대한 공신력 있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내 단말기 출고가 인하 유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2억 4,000여만원을 반영해서 프리미엄 단말기의 가격 위주로 OECD 주요국(10개국 내외) 대상으로 단말기 출고가 국내·외 정보를 비교 분석하고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해외 데이터 로밍 서비스 요금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외 출국자 수 증가 등으로 인해서 해외에서 무선 인터넷 사용량과 관계없이 요금이 일정하게 부과되는 정액형 데이터 로밍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액형 데이터 로밍 서비스는 현재 24시간 단위로만 이용이 가능하여 24시간 미만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1일 24시간 요금을 부담하는 상황입니다. 사용시간 대비 과도한 요금 부담으로 데이터 로밍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게 되는 등 서비스 선택권이 제한되는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로밍 서비스의 마지막 날 12시간 단위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가 개선이 되면 가계통신비가 최대 400억원 정도 인하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위원회에 보고해서 정책방안을 확정하고 이동통신사와 협의를 거쳐서 금년 11월까지 SKT·KT의 네트워크 및 전산을 개발하고 12월 중에는 12시간 단위 로밍 요금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추진일정입니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 비교 공시, 데이터 로밍 서비스 개선과 관련하여 추진일정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 고삼석 상임위원

- 전체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7페이지 추진 일정을 보면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권한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것 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같이 공조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알뜰폰 정책이나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과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논의해야 하는 사항들은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이번에 보고드린 것은 방통위 차원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 위주로 적시를 했습니다. 다만,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정책,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과 관련된 사항은 통신정책의 사전 규제 정책 측면이 크기 때문에 주된 기관이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되겠습니다. 과기정통부 정책방향과 협조를 맞춰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뜰폰 정책과 관련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지난 알뜰통신사업자 정책 간담회를 통해 이동통신 3사와 알뜰통신사업자 간의 불공정행위 시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조치를 취했습니다. 사업자들을 통해 알뜰폰 가입자를 타깃으로 하는 불공정 마케팅은 중지하도록 요청을 했고 저희 방통위가 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일단 과기정통부와 협의해서 진행하는 부분도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가계통신비 인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오늘 이 안건들이 보고가 됩니다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단말기유통법상 지원금 상한제도, 이것이 일몰 폐지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안건이 보고된 성격도 있는 것이지요?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단말기유통법에 대한 평가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과로 보면 입법 목적인 정보 비대칭 해소에 따라 이용자 차별은 감소했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선택적 약정할인제 도입으로 해서 지금 계속 12%에서 20%, 또 20%에서 25%까지 상향한다는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로 인해 통신비 부담이 경감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중저가 통신요금제를 확대해서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넓혀 줬다, 이런 성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용자가 선택하는 단말기나 통신상품 수준이 전반적으로 하향 평준화되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사 입장에서 보면 '공시지원금 한도 설정으로 인해 영업의 자율을 지나치게 제한했다'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단말기유통법 시행의 성과와 비판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번 지원금 상한제 일몰을 계기로 해서 단순히 그에 대한 대비책이 아니라 '이동통신 시장의 규제체계를 재정립한다' 이런 입장으로 대비책을 세워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뜰폰 같은 경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알뜰폰의 결합상품의 취약점이나 포인트 사용에서의 불리한 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통3사로 변경을 강요하거나 불법보조금 과다지급을 통하여 변경을 유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우리가 단속을 해도 이 부분들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알뜰폰이 시장에서 경쟁하는데 제약이 없도록 최대한 우리들이 시장을 잘 모니터링 해야 할 것 같습니다. 5페이지 내용과 관련해서 출고가와 관련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조사 시점에 따라서는 국내 갤럭시 노트4의 출고가가 해외 7개국 평균에 비해 최소 27,700원에서 최대 112,000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차이가 존재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미국에서 갤럭시 S8에 대해서 1+1 프로모션이 진행되고 있고, 구형 폰에 대해서는 최대 350달러의 보상판매를 지원하는 프로모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파악하고 계시지요?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지금 국내 소비자들은 이러한 프로모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제값을 다 주고 단말기를 구입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외국의 경우와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또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사의 출고가뿐만 아니라 프로모션 수준까지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실제 판매가를 공시하는 것도 가계통신비 중 통신장비 요금을 정확히 알리고 또 요금인하를 유도하는 한 방안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말기 출고가 비교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그 정도 선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프로모션까지 다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 여기에서의 차별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또 다른 분들 의견 있으면 주시지요.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 **표철수 상임위원**

- 단말기 출고가 비교공시는 갤럭시만 합니까, 아이폰이나 샤오미폰은 어떻습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지금 예시로 든 것이고, 지금 표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는 OECD 10개 국가에 대해 프리미엄 단말기, 저희가 갤럭시 노트8, V30, 아이폰 8 등 신규로 나오는 프리미엄 단말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교해 볼 생각입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그렇게 해서 이용자들이 널리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이런 제도가 시행되어도 결국은 불법 지원금 문제가 다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 민감하기 때문에 이 제도, 우리가 새로 바꾸면서 이런 것을 널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최대한 홍보활동을 많이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 부위원장님 말씀하시지요.

○ **허 욱 부위원장**

-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 예상되는 시장의 전개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 같은지, 지금 시장 안정화 대책이라고 나왔는데 종전의 지원금 상한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헐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더 리베이트가 불법적으로 전개됐던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 허 욱 부위원장

- 그런데 상한제가 만약에 폐지된다면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계십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우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 긍정적으로 정책효과가 나타나려면 이동사나 제조사가 국민인 직접적인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상향하는 것이 예상되는 정책효과입니다. 그렇지만 지원금이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또 필요시 또 급격하게 하락하면 시장의 불안적 요소가 커지고 시점에 따라 이용자 차별이 확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시장 안정화를 꾀하는 조치를 해 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린 내용 중에 지원금 공시가 현재 7일입니다. 7일 기간을 축소한다든지, 또는 연장한다든지 그런 것은 시장 상황을 보고 고시를 개정해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원금을 통신사들이 올리지 않으면서 불법적인 장려금 지급, 리베이트 지급하는 형태의 불법적인 형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은 저희가 시장 상황을 아주 면밀하게 관찰하겠습니다. 그리고 KAIT라든지 통신사들 또는 소비자단체와 협조해서 면밀하게 감시를 해서 정책효과가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전국 상황반을 가동한다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 협조체계가 되면 실질적으로 전국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유선시장, 이동시장 나누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이런 특정 기간에는 저희가 더욱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전체 인원들이 참여하면 대략 어느 정도 인원이 시장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겠습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시장은 모니터링 요원들이 정확한 숫자는 40~5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미스터리 쇼핑도 하고 다양한 기법으로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소비자로서 단말기를 직접 구매해 보면서 지원금 상한, 그다음에 장려금 상한, 다른 추가적인 인센티브까지 다 추적도 하고 있습니다.

○ 김용일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추가로 말씀드리면 모니터링 요원은 40~50명 정도 되고,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전국 상황반은 이동사의 관계자들과 같이 연합해서 저희가 KAIT와 시장에서 직접 불법행위가 있는지를

체크하고 바로바로 즉시 시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인원은 추후에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허 옥 부위원장

- 초기에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에는 다들 지켜보는 상황이고 초기 시장 안정화를 얼마나 제대로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미 이동통신사뿐 아니라 단말기 대리점, 판매업자들이 다 알고 있어서 그 효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면 오히려 불법영업들이 다시 기승할 수 있고 역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를 잘 아시겠지만 유념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알겠습니다.

○ 허 옥 부위원장

- 분리공시제 도입과 관련해서 제조사가 장려금 비중 확대를 하게 될 경우에 고객혜택, 오히려 지원금은 낮추고 장려금을 높이게 될 가능성도 존재할 것 같은데 제조사 장려금에 대한 관리 기준이 있습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저희는 이통사, 제조사 관계없이 단말기 1대당 약 30만원 정도의 선이 적정한 장려금이다, 장려금은 판매점이 판매점을 운영하기 위한 임대료라든지 판매점 직원의 인건비, 경상경비 등이 장려금으로 충당된다고 보기 때문에 30여만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 장려금을 70만원 준다면 40만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하게 되고, 이 40만원을 가지고 판매점들이 차별적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하거나 편법으로 리베이트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장려금의 수준을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장려금을 주는 것은 적법한 마케팅 활동입니다. 그렇지만 장려금을 통해 고객에게 리베이트를 준다면 불법영업으로 활용될 때 문제가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 옥 부위원장

- 종전의 이통사에 관련된 장려금 기준들은 나머지 쪽 다 있었습니다만 제조사 관리기준들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도 한번...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제조사의 경우에는 주로 장려금이 단말기 1대당 얼마씩 책정되어서 거의 모든 판매점들에게 혜택이 동일하게 가기 때문에 제조사 장려금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저희가 아직 단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말기당 어느 정도 책정이 돼서 모든 단말기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모든 판매점에 동일하게 혜택이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 신문에 최근 거론된 것이 있습니다. 모 프라자에서 고객에게 단말기를 거의 절반 가격에 주는 사항이 발생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크하겠습니다. 특정 제조사의 대리점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고 다른 판매점에 혜택을 안 준다면 차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법행위가 있는지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단말기 장려금에 대한 폭을 높이고 그리고 그것을 활용해서 다양한 차별행위가 나타난 것에 관련해서는 보다 더 정확한 점검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 허 욱 부위원장

- 아까 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기정통부와도 협력해서 일을 점검하고 풀어가야 할 사안들이 있는데 과거 2013년에 방통위 그리고 과기정통부에서 정책협력을 맺은 내용도 있습니다.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단말기 보조금과 관련해서 분야별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던 그 내용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운영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지 혹은 개선방안들이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사실은 단말기유통법이 '14년 10월에 제정되어서 '13년은 단말기유통법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 규정, 이용자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으로 어떻게 보면 경품 제한 형태로 해서 단속했던 사항이어서 사실은 과기정통부와 협력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말기유통법이 제정된 이후는 정확하게 저희와 과기부가 해야 할 책무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분장된 대로 시행하고 향후 협력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협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 김석진 상임위원

-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단통법이 드디어 일몰 한 달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법들도 많이 나와 있었는데 처리되지 못하고 결국 일몰까지 가게 됐습니다. 제가 갖는 관심은 지금까지는 이통사들이 지원금을 상한제로 묶어놓는 바람에 마케팅 비용이 그만큼 세이브가 됐다, 이득을 봤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동안에 좋은 시절이 다 가고 이제는 무한경쟁 시대가 다시 오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동안에 이용차별을 막기 위해서 단통법으로 묶어 놓았던 시장질서가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또 있습니다. 제가 갖는 관심은 그러면 이 이후에 시장 안정화를 어떻게 취할 것인가? 그것이 핵심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대책을 보면 사업자들과 함께 전국 상황반을 운영하겠다, 그런데 기간은 한 달입니다. 마냥 할 수 없겠지만 한 달 이렇게 미리 고지를 해 놓는 것이 과연

유리한 것인지, 가뜰이나 이통사들이 약정할인을 25% 상향 인상되고 여러 가지 압박을 받고 있어서 이통사들이 비상이 걸린 상태인데 이통사들 입장으로는 어떤 편법·탈법을 저지르더라도 가입자를 늘려서 수익을 창출하는 쪽으로 아마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속기간 비슷하게 한 달간 상황반을 운영해서 들여다보겠다, 또 이통사도 함께 참여한다,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자칫 자기들이 이해당사자인데 그런 상황반을 운영해서 단속을 같이 벌이고, 물론 인력 문제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꼼꼼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것 같아서 국장님,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착안하고 계십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우선 한 달간 운영해 보고 필요시 연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상황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반은 방통위 내 사무실 하나를 지정해서 방통위 조사관들과 이통사의 영업 담당 상무들 또는 담당 팀장들이 출근해서 한 달간 전국의 시장의 변동상황을 체크하고 서로 간에 해당 판매점이나 대리점에 즉시 전과를 해서 불법행위를 제재하고 자제시키는 활동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휘 통제하는 부서라고 보입니다. 두 번째로 모니터링 요원은 현재도 활동하고 있지만 전국에 별도로 해서 모니터링 시간도 좀 더 연장한다든지 횟수도 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 시장질서가 교란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원금 공시제도가 있기 때문에 지원금은 공시를 하면 모든 이용자에게 차별 없이 공평하게 지원금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급등락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많이 합니다. 또 하나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선택약정 요금할인제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통사들이 지원금만 무작정 올리면 나중에 선택약정 할인제 요율이 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약간 보완적인 장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시장이 그렇게 요동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리 사전에 대비하는 차원의 상황반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 제도적으로 아까 고시 주기 변경 여부를 검토한다고 했습니다만 상황을 한 달, 보름 단위로 체크해서 상황이 바뀐다면 바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고시 개정안을 상정해서 추진한다든지 하는 그런 대책을 세워 보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우리 예상이 잘 맞기를 바랍니다.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 또 덩달아서 시행령, 고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없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 부분에 특히 자료 제출을 의무화한다든가 또 조사 거부 과태료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들 입법을 빨리 정비해서 나중에 뒷북치지 말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전에 그런 처벌 문제를 미리 손을 다 봐 놓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리공시제는 제조사와 이통사들 간에 입장이 다른데 그런 부분은 많이 조율됐습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지금 LG전자의 경우는 찬성 입장을 저희에게 밝혀 왔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과기정통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정부가 정책결정하면 거기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현재는 분리공시제 관련해서 이통사, 제조사 명백한 반대입장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국회에서 법안이 논의될 때 또 여야 의원님들이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견도 개진하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리고 단말기 출고가를 비교 공시해서 결국은 단말기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오도록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문제는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할 텐데 ‘공신력 있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이렇게 정책방향을 잡아놓았습니다. 공신력 있는 정보를 어디에서 어떻게 입수할지 계획이 있습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우선은 저희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 통해 단말기 출고가 비교공시하는 틀을 짜고 KISDI에서 해외 이통사의 홈페이지 그다음에 해외에 리서치 회사들을 통해 자료를 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서 자료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 김용일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해외시장 가격 자료는 우선 시장조사기관의 결과를 유료로 구입을 1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그것을 실제 가입자라든지 이런 쪽으로 확인을 해서 그것이 맞는지 확인을 거친 후에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표철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해외 아이폰이나 해외에서 제작되는 외산들, 차별이 돼서 국내 제조사만 가격경쟁에서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는 일은 없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데이터 로밍 서비스, 사실 굉장히 우리 피부에 와 닿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행객도 많이 늘어났지만 요즘 ‘9,900원으로 해외 로밍 서비스 무제한 쓴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 하루 9,900원 해외 로밍 서비스 요금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합리적입니까? 과장님, 국장님 개인적 생각은 어떻습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사실은 이통사에서 로밍요금 책정하는 경우에는 로밍요금은 해외 이통사와 국내 이통사 간 서로 협약을 체결해서 요금을 분담해서 책정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요금과 해외요금 기준해서 협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요금이 높고 낮고 이렇게 평가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만 마지막 날 같은 경우 국내에 들어오면 1시간 정도를 쓰고도 24시간 요금을 부담하는 불합리한 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이것은 사업자들과 이용자 편의 제고 차원에서 다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협의된 수준으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지만 국민들 편의를 조금이라도 개선하려고 하는 측면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이런 정책은 굉장히 잘된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당하는 아주 피부에 와 닿는 문제들인데 9,900원이 합당한지, 안 한지 그것은 우리가 비용 산출하는 메커니즘에 참여할 수도 없고 또 요금에 개입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또 해외 제휴사와의 계약관계도 있으니까, 그래서 1시간 쓰고도 12시간 요금을 무는 이런 불합리를 잘 지적하셔서 그렇게 좋은 정책을 만든 것 같습니다. 사업자들과도 다 합의가 된 것이지요?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합의가 됐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이것 왜 12시간으로 했습니까? 예를 들어 8시간, 6시간으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는데….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사실은 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6시간, 12시간 이런 안을 가지고 사업자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해외 출국자가 '16년에 2,238만명 됩니다. 엄청난 고객이고 사업자들은 다양하게 1시간 단위로 해 주면 제일 우리 국민들이 편합니다. 저희도 사업자들과 타협을 이끌어 내기 위해 우선 12시간 단위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참고로 한 가지만 부탁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외에 나갈 때 로밍 안내를 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것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줄은 길게 서 있고 또 출국 수속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되어야 하니까 꼼꼼하게 자세하게 묻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동사

에서 안내하는 대로 계약을 합니다. “며칠날 귀국하세요?” 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데 제도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1시간을 12시간으로 매긴다는 이런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들, 이용자들에게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연 친절하게 안내요원들이 공항에서 안내를 해 줄 것인가? 그것을 이통사들에게 잘 행정지도를 해서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이용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 여행객들에 대해 로밍 서비스, 로밍요금 제도를 제대로 알리고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통위와 이통사, 그다음에 관련 협회와 협의 해서 매년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도 한번 했지만 추석 전에도 한번 하려고 합니다. 로밍요금 개정된 것이 12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사업자들과 하고 있는 사항인데….

○ 김석진 상임위원

- 12월 1일이요?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전산 시스템이 바뀌어야 합니다. 전산 시스템 개발하는 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12월 부터 시행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다시 한 번 더 나가 보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이번에 10월 초에 아마 열흘이라는 엄청난 황금연휴가 시작되는데 기왕이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서둘러서 10월 1일부터 할 수 없습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사업자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요금제가 개편되면 이용약관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전산시스템이 로밍요금 하나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과 묶어서 하기 때문에 전산개발 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단축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업자들과 한 달이라도 단축할 수 있는지 협의를 더 해 보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 고삼석 상임위원

- 이야기 나온 김에 저도 생각하고 있는 것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부위원장님이나 김석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까만 전국 상황반을 운영한다고 해서 특별히 이 업무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이때는 별도 사무실에서 전담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때는 전담시키려고요?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러면 조금 차이 나는데 통상 보면 경찰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집중 단속기간을 100일을 설정합니다. 한 달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9월 말에 지원금 상한제가 일몰이 되면 어느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치고 나오겠습니까? 즉, 10월 한 달 동안은 상당히 눈치 보기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눈치를 본 다음에 이제 규제의 강도라든가 시장의 반응을 본 다음에 11월 되면 또 연말에 치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지적하셨듯이 전국 상황만을 10월 1일부터 31일까지만 운영한다, 이렇게 딱 못을 박기보다는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운영한다고 해서 단계적으로 인력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9월에 삼성 갤럭시 노트8, 그다음에 LG의 V30, 애플의 아이폰 8 같은 프리미엄 폰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9월 초에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9월 중 시차를 두고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9월 말에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더불어서 실제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해결한다고 하지만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사업자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딱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다는 것보다도 모니터링 기간을 좀 더 길게 잡고 있다, 이런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알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 부분 검토를 더 해 주십시오. 로밍 요금 같은 경우 저도 과거에 몇 차례 의견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번에 논의하는 것은 논의하는 것대로 진행하시되, 제가 지적했던 것 중에 아직 반영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는 해외 로밍을 무제한 제공한다고 해서 공정위에서 한번 제재를 받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200MB 이상 쓰게 되면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는데도. 그때 고지를 제대로 안 했다고 해서 제재를 받았는데 이제는 계속 그것이 안내 문자에도 뜨고 상담원이 그렇게 설명해 줘야만 이용요금, 즉 가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데이터의 이용품질입니다. 그런데 외국 나가서 많이 쓰신 분 같은 경우 첫 번째는 외국의 통신환경이 안 좋으면 속도들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200MB 이상만 써도 속도를 현저히 떨어뜨리고 나서 1일 정액제다 하는 것은 서비스의 수준이 상당히 낮은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 부분도 한번 통신사들과 협의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데이터 로밍요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국가들은 데이터 로밍 1일 정액제를 신청하면 통신요금까지 연계해서 통신요금도 현저히 낮은 가격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데가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1일 데이터 정액요금을 신청하면 통화요금 또한 3분의 1 정도로 쓸 수 있는

상품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홍콩만 가더라도 같은 통신사에서 이런 서비스가 제공이 안 됩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만약에 특정 국가에서 데이터 로밍과 통화 요금을 연동해서 저가로 쓸 수 있는 상품이 나왔다면 다른 국가에서도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데이터 로밍요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통화요금까지 연동해서 한다면 실질적으로 해외 여행자들의 통신요금 인하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번 데이터 로밍 서비스 요금 개선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속도의 문제, 그리고 음성통화요금과 연계한 통화요금 인하 대책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해 주신 바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4가지 통신비 부담 완화 대책에 의한 완화 비율은 과기정통부의 선택약정이라든지 단일요금제 등에 비하면 그 양이 미미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용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들을 잘 반영 하셔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3시 30분에 나가야 하기 때문에 조금 발언을 요약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하위 고시 일부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이효성 위원장

- <보고사항 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하위 고시 일부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간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관련 규정의 일몰 등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분기준」(고시),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고시), 「지원금 공시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한 세분기준」(고시)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고시)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재검토기한 연장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부과 세분기준 3건의 고시에 대해서 법제처의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 방식 개선’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17년 9월 30일까지’에서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필수적 감경 기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대상 고시는 과징금 부과 세분기준 고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다음 주 월·화 차관회의·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과징금의 필수적 감경 근거를 신설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반사업자의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감경하고 동일한 위반행위로 위반행위의 종료 일 기준 최근 3년간 위반 사업자가 방통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과징금 감경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말기지원금 상한제 관련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 일몰에 따른 하위규정 고시를 개정하겠습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고시)을 폐지하고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의 관련 조항 및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관련 조항을 개정 또는 삭제하고자 합니다. <조문 대비표> 현행 및 개정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원회에서 보고를 접수해 주시면 8월 31일부터 9월 19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거쳐 9월 규제 심사, 위원회 의결 및 관보게재를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붙임> 4개의 고시 개정안 및 폐지안에 대해서는 <붙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쳤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다음은 비공개 안건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의결사항

가. 법정위원회 보궐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건 (2017-26-155) (비공개)

8. 기 타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회의는 8월 29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9. 폐 회

○ 이효성 위원장

- 이상으로 2017년 제2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5시 15분 폐회 】